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를 맞이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복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 · 사를 가리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고는 민영 보험의 입장에서 진행된 연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공복지에 대해서도 가급적 심도 있게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에 도움이 되는 공 · 사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2, 3, 4장에 걸쳐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장은 이를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재정리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 복지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현 세대부터 점진적인 부담 인상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부담 인상이 불가피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둘째, 건강보장 분야의 경우 비급여 부문의 의료비 관리와 민영보험의 취약계층 보장서비스 공급 확대에 공 · 사 협력이 기여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국민들의 노후 준비 상황이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세심하게 배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공 · 사는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복지비용 증가에 대한 국민 설득

본 고는 세대간 형평성 논의를 통해 베이비부머가 추가적인 복지 부담을 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잠재 GDP와 생산요소에 대한 추정을 통해 복지부담의 증가는 장기적이고 완만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추계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약 6%(5.99%) 수준의 보험료를 26년 후인 40년까지 연평균 0.14%p 속도로 인상하여 9%(9.16%)에 이를 경우 재정 균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균형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가 낮아져 60년 10.80%까지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보험료율을 매년 0.15%p씩 15.0%까지 인상할 경우 40년에는 12.9%, 54년에서는 15.0%에 이르고, 기금 고갈 시점은 60년에서 75년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15% 수준에 이르면 재정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 근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는 유연한 개선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과중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본고는 주요 선진국의 현재 수준의 보험료율(〈그림 Ⅲ-6〉, 〈표 Ⅳ-17〉)과 비교할 때 감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정 안정화를 이러한 완만한 속도의 요율인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하루 빨리 요율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가 선진화되고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마땅히 감내해야 할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는 솔직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한 때이다.

2. 건강 보장 : 협력을 통한 총의료비 관리

본 연구는 건강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공보험의 점진적 요율인상과 더불어 피부양자들을 납부대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징수 저변을 확대하는 보완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의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총의료비 관리는 공 · 사 협력의 여지가 많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는 발전적인 공 · 사 협력을 위해서는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 · 사 간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민영보험의 미래시장이 현재보다는 리스크가 큰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 고는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표준화 그리고 제3자 청구제와 같은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고 정보 포털 기능의 개선을 추가적인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보 포털 기능의 개선으로 환자들에게 의료 관련 정보를 지원하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임으로써 환자 스스로 의료 과소비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건강정보포털이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지만, 너무 일반적인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어 환자가 자신의 진료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건강정보포털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환자에게 컨설팅하는 개념의 새로운 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비급여 부문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공 · 사가 협력함으로써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민영보험의 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 측면에서의 공 · 사 협력과 별도의 취약계층 전용 판매망의 구축을 개선 방안으로 소개하였다.

3. 노후소득보장 : 계층별 차별화된 접근을 통한 상호보완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에 있어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이다. 앞서 언급한 단계적 요율인상에 의해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노후 소득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층소후소득원에 대한 추정을 통해 계층별로 처해있는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나

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우리 국민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으로 나눌 경우 저소득층의 특징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사적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 계층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의 가입이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수익률이 사적연금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만약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2014년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적연금만 가지고도 최저생계비에 상당히 접근하는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과 같이 공적연금의 가입 지원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소득층의 경우 사적 연금의 준비 정도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과 유사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계층은 공적연금 가입률이 양호한 만큼, 사적 연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계층이 주로 속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형 사업장의 퇴직 소득 안정성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며,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가입 확대 노력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 가입의 강제화나 세액공제와 같이 개인연금 인센티브 확대도 중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NEST제도나 독일의 리스터 연금 유형의 지원책을 검토해볼 만 할 것으로 보았다.

상위소득층의 경우는 경제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들 계층도 노후 소득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 기간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고소득자 중에서도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계층도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을 통해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의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다른 계층과는 달리 개인연금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소득공제 한도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의 Catch-up policy와 같은 소득 공제 한도 확대 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기대했다.